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과 추동 요인에 대한 고찰

김은규*

(중앙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70년대의 저항언론 · 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 · 민중언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 ·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확장과 사회운동 진영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해 왔다. 80년대 민중운동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90년대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발현됐다. 또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은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대안적 공론장, 자유언론, 저항언론, 민중언론, 대항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1. 문제 제기

언론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대표적

* kimegy@hanmail.net

인 공론장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민주적 언론질서의 확립은 건강한 공론장 구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9세기말 근대적 신문이 탄생한 이후, 국내에서도 신문과 방송을 중심축으로 한 언론구조가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구조 속에서, 그리고 분단과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 언론은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는 한국 언론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 요인이 정치권력과 자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강력한 정치권력 아래서 한국 언론은 자율성을 상실당하고 제도언론으로 기능했다. 나아가, 사회민주화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회복하면서부터는 자본의 지배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스스로 권력집단화 되었으며, 시장우선주의에 매몰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정치권력에 동조하고 그 보호아래 성장했던 신문은 지배연합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론독과점이라는 왜곡된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공성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할 방송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산업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 영역은 민주적 언론 공론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본과 권력에 침윤된 언론 공론장을 민주적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권력의 강압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사회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언론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후 자본의 영향이 강화된 속에서는 언론시장 질서의 회복, 방송 공영성의 회복과 시민참여 구조의 확장 등의 노력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된 기존의 언론구조를 민주적 질서로 재구축하기 위한 모색이 시민사회의 동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안적 공론장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대안적 공론장은 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 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의사소통 영역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억눌려 있던 시점에서 이러한 대안적 공론장은 민중언론이라는 명칭 속에서 대항언론의 성격을 띠었다. 1980년대 변혁운동 진영에 의해 주로 제작되었던 민중언론은 계급적 당파성에 기초하면서 한국 사회에 내재해 있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풀어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87년 시민항쟁을 기점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확장되면서 대안적 공론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군부정권에 의한 강압통치 속에서 비합법적 매체가 다수를 이루었던 대항언론이 합법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 1987년 국민주 방식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민주언론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바탕으로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소유구조의 언론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지배연합의 헤게모니 유지에 일조해 왔던 한국 신문시장에 침투한 진보언론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이외에도 합법적 대중매체,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에서 발행하는 대안언론들이 잇달아 출현하면서, 한국 언론구조에서 대안적 공론장은 그 영역을 확장했다.

이 시기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은 시민사회의 분출과 함께 성장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운동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동안 계급모순에 입각한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운동 진영은 시민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내부적 분화를 겪게 된다. 87년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은 일차적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되었고, 시민운동은 다시 환경, 경제정의, 여성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하는 가운데 다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은 자신들의 조직적 의사소통과 신사회운동의 가치전달을 위해 기존의 언론구조와 성격을 달리하는 대안매체를 발행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 시민운동의 다원화 속에서 대안적 공론장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비합법 영역에서 합법적 영역으로, 대항언론에서 대안언론으로 그 공간을 확장함과 더불어 성격을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은 방송과 뉴미디어의 영역으로도 이어졌다. 시민사회 진영은 변화된 정치권력을 추동하여 방송구조 개혁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기존의 방송영역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채널이 편입됐다. 기간방송인 KBS에 열린채널이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선보였으며, 방송뉴미디어 1세대로 지칭되는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시민제작프로그램 및 시민채널이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 매체의 등장 역시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에 기여했다. 인터넷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언론구조에 인터넷신문이라는 새로운 언론매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언론 공론장의 전체적인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영역에서는 개방성, 상호작용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대안언론을 일구어내는데 일조 했다. 요컨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는 전체 언론 공론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을 위한 기회의 공간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대안적 공론장의 창출을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음이 물론이다.

이상에서 개략한 바와 같이 한국의 언론 공론장은 국가(정치권력), 자본,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각각의 힘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언론 공론장을 지배하는 주요 동인은 정치권력에서 자본으로 이동해 왔다. 한편, 대안적 공론장은 민중운동을 자양분으로 한 대항언론에서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언론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뉴미디어는 대안적 공론장을 위한 공간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국 언론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대한 과정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이중 특히 시민사회론을 토대로 한국 언론구조의 변화를 정리한 논의들은 국가, 자본, 시민사회의 역관계가 언론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강명구(1994, 2004), 김성문(1998), 김해식(1994), 손석춘(2005), 양승목(1995), 윤영철(1995), 원용진(1998), 조항제(2003)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언론 공론장에 대한 풍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대안적 공론장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안적 공론장은 국가-자본-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고자 한다.

2. 대안적 공론장의 개념화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공동체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하게 거론됐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인 대안적 공론장의 특성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중 이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용어로는 대안언론 개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언론을 개념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이해로는 주류언론에 대응하는 언론이라는 것이다. 대안언론이란 정치권력과 자본에 이바지하는 혹은 이들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매체의 지배질서를 거부하고 현실 속에 은폐되어 있는 모순을 폭로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최영묵, 2005). 대안언론 개념이 여타의 대안적 공론장과 관련된 개념들을 묶어내는 것에는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모색이라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대안적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제도화 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반대하는 일련의 도전적인 시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기존 매체가 지니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는 물론 사회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기존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비민주적 경향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하는 대안매체 운동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지역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민중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이고 참여적으로 운영되는 자주관리매체, 지배집단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저항매체,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민중매체로 나타났다(강상현, 1999). 요컨대, 대안매체는 운영논리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나타났지만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언론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논의에서 대안언론이라는 개념의 부각은 1987년 시민항쟁 이후 새롭게 부상한 시민운동, 신사회운동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논의 차원에서 전개됐다. 주지하다시피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주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강압적 통치체제가 헤게모니적 동의에 의한 통치로 전환되었으며, 정치 및 사회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계급적 관점에 기반한 민중운동이 주를 이루었던 사회운동 영역에 경제정의, 환경 등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이슈화하는 신사회운동이 시민운동차원에서 부각되었다. 시민운동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는 것으로, 대안언론은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내용을 담지하는 것이며(김택환, 1992), 시민운동 진영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언론과는 다른 대안언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춘서, 2000).

한편,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가상 공론장의 출현과 그 대안적 가능

성에 대한 모색 역시 대안언론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먼저, 인터넷과 PC통신의 가상공간은 기존 미디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하고 이색적인 의견들이 소통되는 토론의 광장이라는 차원에서 대안매체로 조명됐다(윤영철, 1998). 또한 가상공간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기반하면서 탈중심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시공간적 제한의 극복, 익명성과 탈매개성, 다양성과 탈대중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기에 기존 매체에 대한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강조됐다(강상현, 2000). 나아가 인터넷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모색은 대안언론의 현실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오마이뉴스』와 같이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뉴스생산 주체의 변화, 독자의 선택성 증가, 기자와 독자의 경계 소멸, 밑으로부터의 의제설정, 다양한 시각전달, 공개적 토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뉴스 생산과 유통을 독점해 온 기존 미디어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제고하는 대안언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선희, 2001). 또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대안성을 후원, 메시지 생산, 의사결정구조, 접근성의 수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대안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임정수, 2003).

대안언론이라는 개념이 1987년 이후의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면, 1987년 이전의 대안적 공론장 논의에는 저항언론, 민중언론, 대항언론, 지하언론이라는 개념이 주로 거론되었다. 이들은 87년 이전 강압적 정치권력에 의한 통치체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 진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개념들이다. 즉, 사회운동 진영은 제도언론의 식민화에 따라 자체적인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그 내용과 유형은 사회운동의 전략과 맞물리며 나타났다. 때문에 이들 용어는 당대의 대안적 공론장을 지칭하는 속에서 그 강조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논의의 발전을 위해 각각의 개념에 더 접근해 보자.

저항언론이란 지배계층의 이익과 사회체제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언론에 저항하고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언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조용철, 1995). 국내에서 저항언론이란 용어는 70, 80년대 자유언론 운동 진영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다. 자유언론은 박정희 파시즘 권력에 의해 언론이 파행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한 상황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당시 자유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며 언론의 민주적 기능회복을 강조했다. 동아·조선투위의 언론자유수호투쟁과 같은 자유언론 운동, 『씨알의 소리』, 『창작과 비평』 등과 같은 매체들이 저항언론으로 상징되었다. 하지만, 자유언론은 계급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소시민적 언론인들의 양심적 언론투쟁이라는 성격에 머물러 있었다(정용준, 1990). 요컨대, 국내에서 저항언론이라는 개념은 계급적 당파성이나 사회운동과의 연계성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기반 한 제도언론에 대한 저항과 억압적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계급적 당파성은 대항언론을 통해 나타났다. 대항언론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언론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계급적 적대 관계 속에서 지배계급 또는 지배권력에 맞서는 언론을 의미하고 있다. 대항언론은 기존 제도적 언론과의 관계에서 내적, 외적 차원으로 기능한다. 내적으로는 기존 언론의 지배체제 재생산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반립이며, 외적으로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변혁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정책 등을 전파해 냄으로써 기존 언론체제의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담당한다. 당파성에 입각한 대항언론의 이론화는 레닌주의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다. 즉, 대항언론은 사회변혁을 담당하는 언론으로, 언론의 역할을 혁명을 위한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의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조항제, 1990). 때문에, 대항언론은 보다 엄밀한 차원에서 대안언론과 구별되기도 한다. 요컨대, 대항언론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변혁 이념의 정당성을 선전, 선동, 조직화

하는 것이라면, 대안언론은 자본주의적 영리추구의 언론체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치를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매개하는 언론형태라는 것이다(김택환, 1998). 대항언론이 당파성 속에서 변혁 운동을 조직화한다면, 대안언론은 신사회운동에 기반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체계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국내의 대항언론은 80년대에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민중언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나타났다. 당시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의 중심성에 주목했다. 민중이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노동분업 내에서 피지배적인 지위에 객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위치에서의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농민과 하층 서민 계층까지를 결합한다(최장집, 1991). 민중언론은 이러한 민중의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언론을 의미한다. 즉, 민중언론은 지배계급에 대칭되는 피지배계급의 당파적 이해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언론이다(조용철, 1995; 박소라, 1991). 국내 민중언론 논의에서는 피지배계급이라는 주체의 피상성을 넘어서 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과 이의 동맹세력으로서 농민 및 도시빈민에 대한 구분 속에서 민족민주언론이라는 구체화가 모색되기도 했으며(정용준, 1990), 노동자계급의 언론이 조명되기도 했다(성지혜, 1990).

지하언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발행되는 언론 유형을 말한다. 지하언론이라는 개념은 국내보다 서구의 대안언론 논의에서 언급되는 용어로, 1960년대 미국에서 봇물을 이루었다. 미국에서 지하언론은 민권운동, 반전운동, 반인종차별운동, 여권운동 등을 토대로 활성화됐다. 지하언론은 이들 정치적 운동을 토양으로 하는 가운데 'overground(공개적, 합법적)'에 대한 대칭개념으로써 사용되었으며, 대항문화(counterculture)를 표현한다는 것이 그 핵심가치로 거론된다(김은규, 2005). 국내의 경우는 80년대 초반 변혁운동 진영에 의해 비합법적 형태로 발행되던 노동자 신문, 정치신문들이 지하

언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지하언론은 기본적으로 대항언론, 민중언론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서구사회에서 나타났던 지하언론과 구별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87년 이전의 국내 대안적 공론장 논의는 당파성과 변혁운동의 관점에 속에서 대항언론, 민중언론, 저항언론, 지하언론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87년 이후 한국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위와 같은 개념들은 점차 그 유용성을 상실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언론 공개장을 둘러싼 내.외적 요인들이 자리한다. 내적으로는 87년 이후 한국사회에 일정정도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 공론장 역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점차 회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기반 한 합법적 대안매체들이 등장하게 됐다. 외적으로는 변혁운동 세력과 이념의 퇴조를 들 수 있다. 87년 시민항쟁 이후 한국의 변혁운동 세력은 내부적 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사회민주화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집결되었던 사회운동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되었고, 시민운동은 신사회운동 가치들과 결합하면서 다시 다원화 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중심이 민중운동, 변혁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대안적 공론장 논의 역시 당파성을 강조하던 대항언론, 민중언론 개념이 빛을 잃어갔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 보여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역사적 진행은 한국사회에 등장했던 변혁운동 이념의 퇴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90년대 들어, 대안적 공론장 논의는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 대항언론 논의의 퇴조 속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에 기반한 대안언론,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여타의 합법적 대안언론 수립논의로 이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년도에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당시 주류 미디어 내에 설립된 대안언론으로 인식되었으며, 『시민의 신문』, 『환경운동』, 『여성신문』, 『주간 노동자신문』 등 각 사회운동 진영에서 발행한 매체들은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나아가 인터넷 등과 같은 뉴미디어는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매개함으로서 대안언론의 공간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등장한 지역신문 역시 대안언론의 폭을 넓혔다. 지역신문은 대안언론의 범주 속에서 풀뿌리언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신문이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는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편, 대안언론 개념과 더불어 대안적 공론장 논의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범주는 시민미디어라는 개념이다. 시민미디어란 기존 주류 미디어의 대안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민의 대중적 접근을 강화하고,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는 주제를 다루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형성,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민미디어는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협의적 의미에서 보자면 시민미디어란 시민이 소유, 운영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대안미디어를 지칭한다. 이에 반해, 광의적 의미의 시민미디어는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시민이 운영과 제작, 편성에 일정한 범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미디어라 할 수 있다(최영묵, 2005, 61-62). 시민미디어 개념은 국내 방송구조에 액세스 프로그램, 액세스 채널, 공동체라디오 등과 같은 시민참여 구조가 확대되면서 유용성이 부각된다. 요컨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소유, 운영되면서도 시민사회의 목소리 전달이 가능한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즉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을 묶어낼 수 있는 개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우선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개념화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논의는 87년을 기점으로 대별된다. 87년 이전의 한국 대안적 공론장은 주요하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계급적 당파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당시 대안적 공론장이 억압적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연합에 대항하여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묶여졌던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형성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대안적 공론장을 개념화 했던 민중언론, 대항언론, 지하언론 등은 당파성과 정치성을 축으로 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87년 이후의 대안적 공론장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연합이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식민화에 대한 대안과 관련된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러한 일상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적 차원에서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역량의 확대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참여 구조의 확장과 제도화는 대안적 공론장의 폭을 넓혀 갔다. 이에 87년 이후의 한국 대안적 공론장을 개념화하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는 참여성과 다원성을 축으로 하고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구조 변동은 당파성과 정치성의 축에서 참여성과 다원성의 축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3. 억압적 국가 권력과 민중언론

1) 국가 후견적 언론 공론장과 제도언론

87년 이전 한국 언론 공론장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국가(정치권력)의 개입이었다. 3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물리력을 기반으로 한 군부정권은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억압했다. 국가는 또한 자본과의 지배연합 형성하면서 언론을 통치수단의 연장으로 삼아 '제도언론'으로 기능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언론정책은 통제와 경제적 지원이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정책이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 정권은 언론통제의 조치로 갖가지 장치와 제도를 마련했다. 5.16 직후 시설기준을 적용한 언론사 정리, 유신

전후 언론통폐합, 문화공보부를 통한 감시 감독, 프레스카드제 시행,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제장치 마련, 통신사의 통폐합 시도, 기관원의 언론사 상주 및 언론검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등의 법률체계를 통한 처벌 장치는 당시 이루어진 대표적 통제유형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언론사에 대한 특혜로 언론의 자본 축적을 도우면서 언론을 국가권력의 통제권 내로 포섭하는 지원정책을 병행했다. 선별적 지원 속에서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통해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였고, 언론이 이윤동기를 향해 치닫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지원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언론이 자본축적을 위해 국가권력에 순응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장기적으로는 언론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언론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한 5공화국 정권은 보다 체계적인 언론통제 정책을 실시했다. 통제는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중 언론통폐합은 언론산업의 시장안정성과 함께 언론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언론기본법은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통폐합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통제는 언론사와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각종 혜택이라는 '당근'과 함께 진행되었다. 5공화국 정권은 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 공익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각종 특혜 및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협조적 신문사들의 발행면수 및 발행가격에 대한 카르텔 체제를 묵인하였고, 윤전기 도입, 부동산 매매 등에서 감세 및 면세, 공익자금의 무이자 대여 등의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언론사들은 출판업 확장, 상업인쇄, 문화사업, 부동산 임대 등 다각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인들에게는 급여인상, 해외연수와 여행, 주택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베풀어 이들을 회유, 순응시켰다.

이 시기 국가가 한국 언론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지만, 자본 역시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강화했다. 언론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은 광고주,[1] 독점기업의 언론사 소유, 언론기업의 자본 확대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독재와 성장주의 속에서 국가가 독점자본을 후견하고,[2] 순치된 언론기업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기에 언론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 역시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요컨대, 자본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지배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87년 이전의 언론통제 유형은 '국가후견주의'(박승관·장경섭, 2001), 또는 '국가흡수적'(윤영철, 1995) 방식으로 분류된다. 요컨대, 군부정권에서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물리력과 법·제도적 장치 속에서 상시적으로 언론을 통제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과점 체제, 카르텔, 세제혜택과 같은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언론통제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언론은 형식상 국가와 분리되어 있었지만, 기능상 국가와 통합되어 있는 제도언론으로 재편되었다.

1) 신문의 경우 광고수입 비중은 1960년대 30% 정도에서 1970년대 50%, 1980년대 초반(5공화국시기) 60% 대로 증가했다. 또한, 방송의 경우, KBS는 1984년을 기점으로 광고수입이 전체 수입의 5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상업방송 체제로 출발했던 MBC는 공영화 이후에도 전체수익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해 충당했다(김해식, 1994).

2)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관련해서는 주변주자본주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등 다양한 논쟁이 80년대 변혁운동 진영에 의해 전개된 바 있다. 이들 논의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사회구성체를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변혁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대체로 한국 자본주의가 국가주도성, 종속성, 독점성, 착취성이라는 파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김성국, 1992).

2) 대안적 공론장 : 자유언론에서 대항언론으로

현대사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순치된 한국 언론은 제도언론화되었다. 제도언론이란 지배도구화된 언론, 지배 체제 속에 함몰된 언론을 지칭한다(이태호, 1984; 조용철, 1995). 언론 공론장이 이처럼 지배연합의 일원으로 기능함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에 대한 모색 역시 한편에서 진행된다. 87년 이전의 대안적 공론장은 이를 추동하는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 힘의 크기에 따라 70년대의 자유언론 시기와 80년대의 민중언론 시기로 구분된다.

70년대는 유신체제 속에서 박정희 정권에 의한 물리적 억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소위 긴급조치시대라 불릴 만큼 긴급조치가 남발되면서 국민의 침묵을 강요했다. 이 시기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으로는 '재야'[3]를 들 수 있다. 재야세력은 언론이 사회적 공론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씨알의 소리』 등과 같은 잡지발행을 통해 정권의 강압통치에 저항했다[4]. 이와 더불어, 재야세력은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운동세력과 결합하며 매 시기별 성명서 발표, 연대적 민주화운동 단체 결성 등을 통해 그 자체적으로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했다. 한편, 제도언론 내에서의 자유언론 투쟁 역시 1970년대의 대안적 공론장을 상징한다. 1974년 『동아일

3) 재야는 한국사회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개념이다. 재야세력은 1960년대 이후 집권세력의 독재적 정치형태가 강화되면서 정권에 집착하지 않고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닌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결집하면서 나타났다(박태균, 1993). 이후 재야세력은 여러 운동세력과 결합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1990년대에는 일부가 제도 정치권에 편입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명망가로 자리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4) 『씨알의 소리』는 1970년 함석헌에 의해 창간되었다. 함석헌은 애초 장준하와 같이 1950, 60년대를 대표하던 『사상계』를 통해 활동했으나, 『사상계』가 김지하의 오적 필화사건을 계기로 정간되고 소멸되자 『씨알의 소리』를 창간했다. 한편, 『사상계』에 의해 수행되던 대안적 공론장의 기능은 이후 1966년에 창간된 『창작과비평』이 일정 부분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강준만, 2000).

보』를 필두로 시작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기점으로 제도언론 내에서 자유언론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해직된 기자들은 이후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창립했으며, 1985년 『말』을 창간했다. 민언협은 이후 대안적 공론장 추동의 중심축인 시민언론운동의 뿌리로 작용했으며, 1988년에 창간된 한겨레신문의 산파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야와 해직기자들 중심으로 전개된 70년대의 대안적 공론장은 억압적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저항언론 또는 자유언론의 시기로 개념화 할 수 있다.

80년에 들어서면서 대안적 공론장은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 '서울의 봄'에 대한 좌절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사회운동 진영의 자각과 반성 속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반성은 70년대의 소시민적, 대중주의적 사회운동이 80년대의 변혁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한국 사회운동이 계급적 당파성에 입각한 변혁운동으로 성격 변화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 역시 변혁운동 진영의 추동에 의해 대항언론,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시기 보이는 대표적 대항언론 지형으로는 노동운동 진영, 학생운동 진영, 그리고 재야 및 사회단체 진영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노동운동 진영은 80년대 변혁운동이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강조한 당파성에 입각해 있었기에 전체 변혁운동의 변화를 반영한다. 80년대 변혁운동은 운동 주체 및 이론의 조직화와 운동의 대중화에 따라 세 차례의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시기는 80년에서 84년까지로 사회운동이 이론과 실천에서 변혁운동으로 자기 정립해가는 과정이며, 이는 선진적인 소그룹(서클)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85년에서 87년까지로, 80년대 초반을 통해 준비되어 온 변혁운동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수준으로 정형화되는 시기이다. 변혁운동 세력은 1985년을 계기로 소그룹적 논의구조에서 공개적 논의구조로, 비합법운동에서 합법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세 번째 시기는 87년 민주항쟁

을 분기점으로 하며, 이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급속히 진행된 시기이다(조희연, 1989). 변혁운동 진영은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레닌주의에 입각한 대안적 공론장을 발전시켰다. 초기 전단과 소책자가 점차 노동조합 소식지와 정치신문[5]으로 발전하며 노동계급과 변혁운동의 이념을 전파했다. 나아가, 소식지는 노동조합신문으로 이어졌고, 『전국노동자신문』과 같은 합법적 노동자언론의 설립을 통해 대안적 공론장을 확장했다.

학생운동 진영은 1984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크게 활성화 되었고, 자발적 대학언론과 공식적 대학언론을 통해 대항언론을 발전시켰다(정용준, 1990). 자발적 대학언론은 정파 및 학생회의 기관지, 유인물, 대자보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6]. 이중 특히 대자보는 대중적인 선전선동 매체로써 대학구성원들의 관심을 촉발했다. 학생운동 진영은 이러한 비공식적 매체를 통해 정치정세를 학생대중에게 전달했으며, 운동의 방향, 대중역량 강화 등을 모색했다. 한편, 공식적 대학언론인 대학신문 역시 기존의 학교 홍보지적 성격을 탈피하고 대항언론의 대열에 합류했다. 80년대 전반, 당시 합법적 매체가 없었던 변혁운동 진영은 운동이론의 대중적 전파를 위해 공식매체인 대학신문을 십분 활용했다. 그러나 대학신문은 운동이론지로 과도하게 편향되는 문제를 나타내면서 대학구성원과 괴리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신문 기자들을 중심으로 매체혁신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야 및 사회운동 단체들의 기관지 역시 80년대의 대항언론을 구성했다.

5) 87년 이후 전개된 전국적정치신문 논쟁은 변혁운동의 전위조직과 미디어전략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는 크게 1) 즉각적인 전위조직과 이의 실천으로서 정치신문 발간을 주장한 그룹(『선봉』, 『노동계급』, 『새벽바람』)과 2) 선진노동자그룹과 대중정치신문의 발간을 주장한 그룹(『서노련신문』, 『노동자의 길』, 『노동자의 깃발』)으로 대별된다(정용준, 1993).

6) 당시 대학가의 대표적인 비공식적 매체로는 서울대의 『자유언론』, 『전진』, 성균관대의 『민주회보』, 중앙대의 『의혈』을 들 수 있다(이태호, 1990). 또한 대표적 정파지로는 『해방선언』과 『민족민주선언』을 들 수 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민주화의 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민중의 소리』,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의 『말』, 가톨릭농민회의 『농민의 소리』, 한국기독교농민회의 『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70, 80년대의 해직기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민언협이 발간한 『말』은 '보도지침' 폭로 등 제도언론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공식적 대항언론으로서의 인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80년대의 대안적 공론장의 특징은 첫째, 변혁운동 세력에 의해 추동되었기에 계급적 당파성을 바탕으로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조직화 및 전달하는 대항언론의 성격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80년대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민중언론이라는 개념은 대항언론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7] 둘째, 대안적 공론장의 매체들은 대부분 비합법, 반합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모델로 했던 변혁운동 세력은 레닌주의적 선전선동관에 입각한 대항언론 전술을 구사했다. 이에 대항언론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념의 기초로 했던 군부정권에 의해 탄압 받았기에 비합법 혹은 반합법적 형태를 유지했다. 셋째, 87년 언론자유화를 계기로 제도권적 언론공개장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이 8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87년 이후 한국 언론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 내에 합법적 대중지,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관지 등 당파적 성격을 탈피한 매체들이 나타났지만, 민중언론 역시 80년대 말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

7) 이에 정용준은 학생운동 진영에 의해 발행된 대항언론을 민중언론이 아니라 민주언론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민족민주언론이라는 틀 속에서 민중언론과 민주언론을 묶고 있다(정용준, 1990).

4. 시민사회의 확장과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1) 제도적 권력으로서의 언론, 그리고 자본의 통제 강화

19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시민영역이 확장됐다. 그동안 강압적 국가권력에 의해 위축되었던 시민사회가 분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구조 역시 국가후견주의적 체제를 벗어난다. 1987년 이후 등장한 6공화국 정권은 약한 억압과 강한 유인에 의한 포섭적 통제 방식의 언론정책을 구사했다(윤영철, 1995). 포섭적 통제는 한편으로는 차별적 포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을 대리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언론 영향력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가의 언론개입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가로 인해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민사회의 동의에 의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속에서 나타난 언론의 변화는 자율성을 획득한 언론이 스스로 유사권력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유사권력화는 전통적으로 지배연합을 형성했던 국가-언론 관계 속에서 언론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언론의 유사권력화는 국가와 언론의 관계가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조합주의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박승관·장경섭, 2001), 도구적 권력에서 제도정치적 권력의 장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낸다(강명구, 2004).

한편, 87년 이후 언론시장은 통제적 시장에서 규제적 시장으로 전환됨으로써 자본의 유입 및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강명구, 2004). 신문시장은 증면경쟁, 새로운 신문의 창간 속에서 광고주, 자본의 언론소유, 언론자본의 확대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가후견적 언론구조에서 자본을 축적한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신문사로 자리를 굳혀갔다. 방송시장의 경우

민영방송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민영 혼합체제가 정착됐다. 이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방송이 도입되면서 방송영역은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매체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요컨대, 87년 이후 한국 언론구조는 87년 이전에 비해 두 가지 특징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는 언론의 자율성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에서 자본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후견주의 구조를 벗어난 언론이 제도정치적 권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 언론 공론장이 여전히 지배연합의 일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위한 공론장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언론은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 대안적 공론장 : 대항에서 시민참여로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는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대안적 공론장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변화를 맞이한다. 하지만, 87년 이후의 대안적 공론장은 시민사회 내의 주도세력 교체 과정,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뉴미디어의 출현 등에 따라 다소 중층적인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대안적 공론장은 시민사회에 의해 그 동력을 제공받는다. 때문에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의 목표와 전략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에 87년 이후 시민사회 주도세력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87년을 전후로 시민사회의 주도 세력은 변혁운동에 입각한 민중운동 진영이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진영으로 분화됐다. 여기에는 80년대 말에 보인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역사적 현실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치에 입각한 시민운동

의 성장이 자리한다. 이후 90년대 들어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 위주의 시민운동 진영으로 사회운동의 주도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시민운동은 90년대 중반 이후 종합적 시민운동 영역과 특수전문적 시민운동의 분화 속에서 더욱 다원화됐다(김은규, 2003, 161-165).

민중운동이 80년대 말까지 그 주도권을 유지했던 것처럼, 80년대 말까지의 대안적 공론장은 민중언론이 그 중심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87년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 노동운동의 합법적 공간 확장을 계기로 민중언론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 활성화됐다. 예컨대, 변혁운동 진영에서 제기됐던 정치신문 논쟁은 87년과 88년을 정점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노동조합신문 역시 활성화 되었고, 『전국노동자신문』과 같은 합법적 대중지가 등장했다.

한편, 1988년 등장한 『한겨레신문』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주 신문이라는 점에서 한국 신문구조에 나타난 대안언론으로 간주됐었다. 그리고 70, 80년대 해직기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광범위하게 분출된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는 점 역시 한겨레신문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창간 이후 한겨레신문은 제도언론이 다루지 못한 성역을 과감히 보도하고 권언유착의 틀을 깨고자 노력함으로써 진보진영의 기대에 부응했다. 당시 언론 공론장이 제도언론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등장은 대안적 공론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해야 했던 한겨레신문은 제도정치 권력의 장으로 이동했다(강명구, 2004, 328)는 평가를 받을 만큼 초기의 위상을 상실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90대에 들어서면서 대안적 공론장은 80년대의 대항언론, 민중언론 영역에서 대안언론[8] 영역으로 전환된다. 대안언론이라는 개념의 부각은 한국 사회

8) 2절 개념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안언론이라는 개념은 주류언론에 대한 대응이라

운동의 주도세력이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다. 시민운동은 당파성에 입각한 계급적 관점보다는 생활세계 속에 내재된 일상적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운동에 집중한다.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은 자신들의 가치전달과 조직적 의사소통을 위해 스스로의 매체를 활용했다. 경실련의 『시민의 신문』,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운동』 등이 90년대 초반 시민운동단체에서 기관지 형태로 발간한 대안적 공론장이다. 이중 시민의 신문은 1997년 전국 시민운동 단체 공동의 신문으로 재출범함으로서 한국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대안적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생태주의를 표방한 『녹색평론』, 여성운동을 제기했던 『여성신문』 역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치 속에서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매체들은 시민운동의 활성화 속에서 기존 주류 미디어가 담보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이슈를 시민사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지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 역시 80년대 말, 90년대에 등장했던 대안언론의 범주 속에서 주목할 수 있다. 지역신문은 시, 군이나 대도시의 구 단위에서 주간으로 발행되어 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신문이다. 지역신문의 최대 장점은 지역공동체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자본으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기에 거대 중앙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장호순, 2001). 풀뿌리 지역신문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신문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적 운영을 통해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신문으로는 『홍성신문』, 『옥천신문』, 『해남신문』 등을 들 수 있다.

는 포괄적 의미 속에서 대항언론, 민중언론 등의 개념을 아우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시기별 대안적 공론장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당파성에 입각한 대항언론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대안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시민미디어 영역으로 그 지평을 확장한다. 90년대에 등장했던 대안언론의 영역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에 시민참여 구조를 일구어냄으로서 대안적 공론장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언론운동, 퍼블릭액세스 운동과 같은 시민사회의 노력과 함께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이라는 요인이 자리한다.

시민언론운동은 언론운동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개별활동과 연대활동을 통해 언론개혁을 지속적으로 추동해 왔다. 초기 모니터운동, 수용자 운동에 머물렀던 이들 시민언론운동 진영은 점차 법제도 개혁운동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2000년 방송법과 2005년의 신문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여기에는 언론개혁을 추진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시민사회와의 조합주의 정책 역시 바탕하고 있다. 2000년 방송법은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보도전문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등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의 열린채널, 케이블방송의 지역채널, 위성방송의 시민채널 속에서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이 보장되었다. 시민이 직접 소유 운영하는 대안언론의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 방송구조에 시민참여의 폭을 보장함으로써 대안적 공론장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또한 『오마이뉴스』와 같이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신문의 등장 역시 대안적 공론장을 확장했다. 『오마이뉴스』의 시민참여 미디어적 특성은 전문가 중심적인 언론모델을 탈피하여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기자 집단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시민사회의 언론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개방적 조직운영은 시민기자들의 기사작성 과정과 생활세계 속의 삶을 연계함으로써 공론장의 맥락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특성으로 이어진다. 시민기자에 의한 미디어 참여는 다양한 직업, 계층, 지역 속에서 생활세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시민미디어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홍성구, 2001).

이상에서 보여지듯, 87년 이후 한국 대안적 공론장은 대항언론, 민중언론에서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영역으로 그 내용성이 변화했다. 여기에는 물론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라는 사회적 요인이 중심축으로 자리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이 민중운동 진영에서 시민운동 진영으로 변화됨으로써 당파성에 입각한 대안적 공론장이 시민참여와 다원성을 토대로 하는 대안적 공론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대안적 공론장은 시기별로 어떠한 유형으로 발현되었으며, 시기별 특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그 흐름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의 유형은 70년대의 저항언론/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민중언론, 그리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시민미디어라는 유형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모두가 인식하듯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87년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장됐다. 87년 이전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억압적 정치권력

<표 1>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유형

시기	주류 언론		대안적 공론장			
	억압 요인	상징 권력	추동 요인	핵심 가치	유형	주요 매체
70'	정치 권력	도구적 권력	소시민적 운동	민주화	저항언론 자유언론	자유언론운동 저항적 매체
80'			변혁운동 민중운동	당파성	대항언론 민중언론	전단, 소책자 대자보 기관지 노동조합신문 정치신문 노동자신문 대학신문
90'	자본	제도적 권력	시민운동 뉴미디어	다원성 참여성	대안언론	시민운동 매체 지역신문
00'					시민미디어	인터넷신문 소출력라디오 액세스프로그램 액세스채널

속에서 시민사회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주류 언론 역시 국가 후견주의에 입각한 도구적 권력으로 기능했다. 이에 반해, 대안적 공론장은 주류 미디어와는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 대안적 공론장은 추동 요인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소시민적 사회운동이 주축을 이루었던 70년대는 재야, 지식인 그룹에 의한 저항적 수준의 언론활동이 전개됐다. 또한 제도권 언론사 내부의 자유언론 운동이 당시를 대표하는 대안적 공론장이었다. 하지만, 군부정권의 교체기에서 경험한 봄의 실패와 광주민중항쟁은 사회운동 진영의 각성과 함께 운동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한 변혁운동이 사회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했으며, 대안적 공론장 역시 당파성을 견지한 대항언론, 민중언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민중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사회운동 역량의 축적 속에 전개된 87년 민주항쟁은 한국 사회구조 변화의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시민사회가 분출하고 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통치 전략도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자본으로 이동했으며, 언론은 도구적 권력에서 제도적 권력으로 변화했다. 언론이 지배연합의 구조 속에서 힘을 강화함에 따라,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언론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적 공론장을 여전히 발전시켰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이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 역시 다원성과 참여성을 토대로 한 대안언론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사회의 성장은 정치권력의 성격 변화도 함께 견인해 냈다. 이에 따라 개혁적 정부가 잇달아 선출됐고,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동의전략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언론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정정도 기존 주류 언론구조에 시민의 참여가 강제 됐다. 대안적 공론장의 영역이 기존의 대안언론과 더불어 시민미디어라는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미디어 유형의 대안적 공론장은 주류언론과 선을 긋고 독립적인 형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류 언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전체적 범위의 대안적 공론장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이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첫째,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진영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했다는 것이다. 민중운동이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유형으로 발현됐다. 셋째는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이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했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어 사회운동의 변화는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구 (1994).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언론정책. 『신문과 방송』, 1994.6월호, 3-13.

_____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정책.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8.

강상현 (1999).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14권 1호, 7-40.

강준만 (2000). 『권력변환: 한국언론 117년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김성국 (1992).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149-169쪽). 서울: 한울.

김성문 (1998).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은규 (2003). 『미디어와 시민참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_____ (2005). 다윗과 골리앗을 넘어서: 대안미디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 틀과 그 함의.『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255-282.

김택환 (1992). 새로운 사회운동과 대안언론. 『한국언론학보』, 27호, 97-119.

_____ (1998). 한국에서 독립언론의 현실과 전망. 전국언론노동조합 10주년 연구논문집, 『한국언론의 독립과 내적 통제구조』. 서울: 언론노동조합.

김해식 (1994). 『한국 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박선희 (2001). 인터넷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17-155.

박소라 (1991). 민중언론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박춘서 (2000). 시민운동과 대안언론: 한국적 대안언론의 유형 모색. 『한국언론학보』, 44권 3호, 190-221.

박태균 (1993).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155-176). 서울: 창작과비평사.

성지혜 (1990). 80년대 노동자 언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신문학과 석사논문.

손석춘 (2005).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승목 (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유재천 외,『한국사회변동과 언론』(93-146쪽). 서울: 소화.

윤영철 (1995).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유재천 외,『한국사회변동과 언론』(181-225), 서울: 소화.

_____ (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국언론학보』, 43권 1호, 184-218.

원용진 (1998). 『한국 언론민주화의 진단』.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태호 (1984). 제도언론과 민중언론. 송건호 외, 『민중과 자유언론』(13-50쪽). 서울: 아침.

임영호 (1995). 한국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성격. 유재천 외,『한국사회변동과 언론』(227-264쪽). 서울: 소화.

임정수 (2003). 대안매체로서 인터넷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34-59.

조용철 (1995). 제도언론과 대항미디어에 관한 전망과 가능성. 방정배 · 김민남 공편, 『언론과 현대사회』(281-319쪽). 서울: 나남.

조항제 (1990). 대항언론의 이론과 전망.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초판 (337-354쪽). 서울: 한울.

_____ (2003).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권력』. 서울: 한울.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 ·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11-36쪽). 서울: 죽산.

정연우 (1990). 1980년대 언론의 사회적 성격. 김왕석 · 임동욱 외,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213-256쪽). 서울: 아침.

정용준 (1990). 민족민주언론운동론. 김왕석 · 임동욱 외,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291-333쪽). 서울: 아침.

정용준 (1993). 민주진영의 90년대 미디어 전략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3호, 55-85.

최영묵 (2005). 『시민미디어론』. 서울: 아르케.

최장집 (1991). 민중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 『사회비평』6호, 326-352.

홍성구 (2001). 숙의민주주의와 인터넷 시민미디어. 『언론과 사회』, 9권 4호, 173-208.

(최초 투고 및 최종원고 제출 2005. 12. 1)

The Transformation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and its Motive in Korea

Eun-Gyoo Kim

Lecturer / Researcher

(Communication &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The concept of alternative sphere is terminologically various; resistance media, counter media, minjung media, grassroots media, underground media, alternative media, civic media, etc. Each terminology reflect the feature of times and the emphasis of advocator. This article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and its motive in Korea. In a world, Korea's alternative public sphere has changed as following: resistance media and liberty media in 70', counter media and minjung media in 80', alternative media in 90', and alternative media and civic media in 2000'. The motive of transformation is basically the expansion of civil society and extension of social movement in Korea. As social movement's character has changed, the feature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has also changed. Minjung movement played key role of social movement in 1980', the alternative public sphere characterized as minjung media or counter media which was based on working class consciousness. After this, According as civil movement have initiative of social movement, the character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changed by alternative media and civic media. Besides, this article argue that the alternative public sphere of Korea has changed dialectically with social movement.

Key words : Alternative Public sphere, Liberty Media, Resistance Media, Counter Media, Minjung Media, Alternative Media, Civic Media